

#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 Hansun Premium Report

주 제: 한국 보수의 위기와 정치적 과제  
발제자: 김주성 한국교원대학교 명예교수  
일 시: 2017년 03월 16일 (목) 오전 7시 30분  
장 소: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 제247회 정책세미나 주요 내용

#### < 요약 >

☞ 3월 16일 정책세미나에서는 김주성 한국교원대학교 명예교수를 연사로 '한국 보수의 위기와 정치적 과제'를 주제로 논의했습니다.

■ 한국 보수는 근대국가 수립, 자본경제 확립, 민주정치 완성이라는 '따라잡기 근대화'의 3대 목표를 실현하였다. 하지만 '따라잡기 근대화'였기 때문에 한국 보수는 정당성의 위기를 마주하게 되었다. 한국 보수의 정치적 행위는 '정형(定型) 따라잡기'였다. 건국-자본요소의 성장-민주화라는 단계별 정치행위의 평가기준이 존재하였다. 평가기준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채 '따라잡기 근대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단계별 정치행위가 보수의 정치목표로 건인되고 평가되어 버렸다. 정치행위에 대한 평가가 이중적이었으므로 성공·실패가 공존하는 정치적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 오늘날 한국의 보수는 정통보수다. 시장경제 체제를 수립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완성하였지만 정당성의 위기를 초래했다. 건국 보수와 산업 보수가 강제수단을 동원하여 이념이 상충되면서 정권 내 위기와 대립이 발생했다. 오늘날에는 보수와 진보 간의 대립이 나타나고 있다. 보수 진영은 현대정치체도를 자유주의, 공화주의 및 민주주의의 혼합으로 이해하여 자유주의적 가치와 공화주의적 가치를 신장하고자 한다. 반면 진보 진영은 민중의 이익을 확대하고자 참여 및 광장민주주의를 이끌어가려 한다. 보수와 진보 진영의 이념적 정치 갈등은 보수 정치의 정당성 위기를 초래하였다.

■ 한국 보수가 지키고자 하였던 자유적 가치와 공화적 가치는 보수 리더십이 실패하면서 부터 위기에 처하였다. 소통부재와 권위주의적 태도로 인하여 보수 리더십이 현실감을 상실하였다. 현실을 체감하지 못한 상태로 이명박 정부의 정치유산을 모두 거부하면서 정책과 인물 승계마저 거부함으로써 실패하였다. 교육 정책이 뒤바뀌면서 산업 정책도 혼잡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공천파동을 일으키며 ‘자기 편’을 기준으로 상대방을 배제하려는 뺄셈정치 행태를 보이기까지 하였다. 결정적으로 기업의 재산권 및 기업경영자 울권 침해와 헌정수호의지를 의심받아 대통령이 탄핵 선고를 받았다(2017.3.10). 한국 보수 정체성을 보수정권 스스로 파괴한 ‘실패의 위기’로 볼 수 있다. 이 ‘실패의 위기’는 헌정사상 보수 진영의 최대 위기로 보인다. 언론권력의 광폭 행진은 통제가 불가능하며 대통령 담화도 역효과를 낳았다. 정계의 정치력 부재로 촛불민심이 폭발해버렸다. 집권정당의 분열이 탄핵정국을 야기하였다. 태극기 집회가 일어나고 보수가 결집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보수 진영의 지지율은 2013년 40%에서 2016년 26%로 떨어졌다. 보수 진영은 구심점을 상실하였고 정치위기 돌파의 마지막 문턱에 서 있다.

■ 한국 보수는 정체성을 재정립해야 한다. 한국 보수는 미래를 재창조하기 위해 여섯 가지 정치적 과제를 이행해야 한다. 양심적 판단은 보수가 갖는 가장 큰 힘이다. 도덕을 재무장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기부와 봉사를 실천하여야 한다. 미래의 주역인 제4차 산업혁명 담론을 장악해야 한다. 건국·산업·정통세력이 협력하여 현대사를 통합하고 역사프레임을 다시 세워야 한다. 베트남을 벤치마킹하여 미중대결구조 속에 놓인 한반도 안보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타국의 간섭을 더 이상 받지 않고 한국의 국방력을 과시할 수 있는 자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적어도 보수 정권간의 정책과 인물이 계승되어 연속성을 잃지 않도록 전 정권의 성과를 잘 살펴볼 필요도 있다. ‘편 가르기’식의 뺄셈정치도 지양되어야 하며 보수와 중도가 통합될 수 있도록 덧셈정치를 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보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념에 충실한 보수정당을 정립하고 7080정치의식에서 벗어난 참신한 인물들을 찾아야 한다.

## ■ 정치적 위기 속에서 성장한 한국의 보수

### : ‘따라잡기 근대화’ 목표 실현과 한계점

- 한국의 보수는 정치적 위기를 끊임없이 겪어왔다. 두 번의 ‘성공의 위기’로 민주주의를 완성하였지만 2008년 이후 ‘실패의 위기’를 맞닥뜨렸다. 오늘날 정통보수가 마주한 정치적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보수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 한국의 민주주의는 서구의 모델을 도입한 ‘따라잡기 근대화’로 만들어졌다. 건국 세력이 1948년에 자유민주주의를 국가이념으로 지정하여 근대국가를 수립하였다. 이후 1962년 자본주의경제가 확립되면서 중산층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중산층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간극을 좁히면서 민주주의의 기반을 마련해줬다. 국민총소득이 3,000달러 이상이 되면 민주화 후퇴 가능성이 줄어들고, 6,000달러 이상이 되면 민주화가 후퇴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한국은 2000년에 국민연소득 6,000달러 이상을 기록하면서 민주정치를 완성하였다. 국민 모두가 투표에 참여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선거 민주주의가 실행되었다. 한국의 보수는 근대국가 수립, 자본주의경제 확립, 민주정치 완성

이라는 ‘따라잡기 근대화’의 3대 목표를 실현하였다. 하지만 ‘따라잡기 근대화’였기 때문에 한국의 보수는 정당성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 한국 보수의 정치적 행위는 ‘정형(定型) 따라잡기’였다. 건국-자본요소의 성장-민주화라는 단계별 정치행위의 평가기준이 존재하였다. 이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채 ‘따라잡기 근대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단계별 정치행위가 보수의 정치목표로 견인되고 평가되어 버렸다. 정치행위에 대한 평가가 이중적이었으므로 성공·실패가 공존하는 정치적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 ■ 건국 보수의 성공과 위기

### : 국가안보 확보와 교육 체제의 완성 등 성과 이룬다

- 근대국가가 수립되었던 1948년, 건국 보수는 국민국가의 체제수호를 위해 반공이념을 도입하였다.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가장 중시했던 민주이념은 국가 통제를 기반으로 한 반공이념과 끊임없이 충돌하기 시작하였다. 근대국가 유지를 위해 한국의 보수는 국가를 통제해야만 했다. 허나 진보세력은 이러한 한국의 보수가 지닌 반공이념을 ‘정치적 악(惡)’으로 바라보기도 하였다. 건국시기에 보수 정당성의 위기를 가져온 이 모순관계는 국가보안법, 부산정치파동, 사사오입 개헌에서 드러난다.

- 건국 보수는 국가안보를 확보하고 교육체제를 완성하는 데 큰 성공을 거두었다. 농지개혁으로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6.25 한국전쟁을 경험하고 한미방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국방체제를 확고히 다졌다. 초등의무교육 체제도 완성되면서 영국과 비슷한 규모의 대학생들을 양성하였다. 1960년에 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4.19혁명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 민주주의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1961년 국내총생산(GDP)이 82달러였으나 이후 상승하면서 1969년 재정자립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 ■ 산업 보수의 성과와 한계

### : 시장경제 확립과 중산층 형성에 성공

- 자본주의경제를 확립한 산업 보수는 ‘집중적 투자로 비교적 우위를 점령한다.’는 ‘동태적 비교우위론’을 창안하였다. 아담 스미스의 정태적 비교우위론에 착안해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단계를 벗어나려는 노력이었다. 자본과 기술을 빌려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거래하여 자본주의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국가동원 체제의 개발권위주의에 기반한 경제발전 전략으로 시장경제가 활성화되고 중산층이 형성되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상반되지만 경제성장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고조되면서 민주정치가 확립되기 시작한다. ‘자본주의경제 발전’과 ‘민주정치 확립’이라는 산업 보수 정치목표의 모순은 민주정치의 핵심기제를 훼손하기도 하였다.

- 한일회담 개최, 광부와 간호사 독일파견, 월남파병, 중동건설 등으로 초기자본을 확



[그림 1] 4.19혁명

건국 보수에 의해 교육체제가 완성되었다. 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4.19혁명이 발생하였으며, 민주주의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보하였다. 1960~70년대에 해외원조를 더 이상 받지 않았음에도 수출주도형 경공업으로 1970년대 당시 북한 GDP를 추월하는 놀라운 경제성장을 거두었다. 1977년 수출주도형 중공업으로 수출규모가 100억 달러에 육박하였고 국민소득은 1,000달러로 상승하였다. 국가주도형 경제성장과 함께 입지를 굳힌 중산층과 산업노동자들은 6.10민주항쟁을 통해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표출하였다. 1987년 당시 GDP는 3,509 달러로 민주화의 후퇴 가능성이 낮아지는 시점에 접어들었다.

## ■ 정통보수의 정당성 위기

### :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이념적 정치 갈등

- 오늘날 한국의 보수는 정통보수다. 시장경제 체제를 수립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완성하였지만 정당성의 위기를 마주하였다. 건국 보수와 산업 보수가 강제수단을 동원하여 이념이 상충되면서 정권 내 위기와 대립이 발생하였다면, 이제는 보수와 진보 간의 대립이 나타나고 있다. 보수 진영은 현대정치제도를 자유주의, 공화주의 및 민주주의의 혼합으로 이해하여 자유주의적 가치와 공화주의적 가치를 신장하고자 한다. 반면 진보 진영은 민중의 이익을 확대하고자 참여 및 광장민주주의를 이끌어가려 한다.
- 오늘날 한국의 보수가 지키고자 하였던 자유주의적 가치와 공화주의적 가치는 실패의 위기를 겪고 있다. 경제적 자유는 공공의 이익을 보장한다. 건국 세력과 산업 세력이 공공의 이익을 신장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하지만 민중이익을 확대하려는 진보 진영과 정치목표가 대립되고 있다. 공공의 이익 신장에 관하여 한국의 보수가 철저하지 못한 점이 있었는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그림 2] 6.10민주항쟁

산업 보수에 의해 추진된 국가주도형 경제성장으로 두터워진 중산층과 산업노동자들은 6.10민주항쟁을 통해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표출하였다.

## ■ 헌정사상 보수 진영의 최대 위기 : 보수정치의 정체성을 재정립해야 한다

- 한국의 보수가 지키고자 하였던 자유적 가치와 공화적 가치는 보수 리더십이 실패하면서부터 위기에 처하였다. 1960~70년대 정경유착의 정치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시장개입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정부의 시장개입은 경제주체의 자율권을 침해하면서 자유주의적 가치와 공화주의적 가치를 동시에 해친다. 박근혜 정부의 소통부재와 권위주의적 태도로 인하여 보수 리더십이 현실감을 상실하였다. 현실을 체감하지 못한 상태로 이명박 정부의 정치유산을 모두 거부하면서 정책과 인물 승계마저 실패하였다. 교육 정책이 뒤바뀌면서 산업 정책도 혼잡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공천파동을 일으키며 ‘자기 편’을 기준으로 상대방을 배제하려는 빨섬정치 행태를 보이기까지 하였다. 결정적으로 기업의 재산권 및 기업경영자율권 침해와 헌정수호의지를 의심받아 올해 3.10 대통령이 탄핵 선고를 받았다. 한국의 보수 정체성을 보수정권 스스로 파괴한 ‘실패의 위기’로 볼 수 있다.

- 이 ‘실패의 위기’는 헌정사상 보수 진영의 최대 위기로 보인다. 언론권력의 광폭 행진은 통제가 불가능하며 대통령 담화도 역효과를 낳았다. 정계의 정치력 부재로 촛불민심이 폭발해버렸다. 집권정당의 분열이 탄핵정국을 야기하였다. 태극기 집회가 일어나고 보수가 결집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수 진영의 지지율이 2013년 40%에서 2016년 26%로 하락했다. 보수 진영은 구심점을 상실하였고 정치위기 돌파의 마지막 문턱에 서 있다.



- 한국의 보수는 정체성을 재정립해야 한다. 보수의 보(保)자는 사람 인(人), 입 구(口), 나무 목(木)이 결합하여 아이를 등에 업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다. 미래를 준비하는 보수의 자세를 상징한다. 보수의 수(守)자는 집 가(家)와 손 수(手)가 결합하여 집을 지킨다는 의미를 갖는다. 집은 현실을 지칭한다. 보수(保守)는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개혁정치를 추구한다. 즉 과거와 싸우는 회고적 현실(Retrospective Reality)보다는 미래지향적 현실(Prospective Reality)을 지키려고 해야 한다.

## ■ 미래를 재창조하기 위한 보수의 여섯 가지 과제

**: 기부와 봉사 · 제4차 산업혁명 담론 장악 · 역사 프레임 재설정 · 안보문제 해결 · 보수 정권 간 연속성 · 보수와 중도의 통합**

- 한국 보수는 미래를 재창조하기 위해 여섯 가지 정치적 과제를 이행해야 한다. 양심적 판단은 보수가 갖는 가장 큰 힘이다. 도덕을 재무장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기부와 봉사를 실천하여 한다. 미래지향적 현실을 지키기 위해 미래의 주역인 제4차 산업혁명 담론을 장악해야 한다. 건국·산업·정통세력이 협력하여 현대사를 통합하고 역사프레임을 다시 세워야 한다. 베트남을 벤치마킹하여 미중대결구도 속에 놓인 한반도 안보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타국의 간섭을 더 이상 받지 않고 한국의 국방력을 과시하는 자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적어도 보수 정권간의 정책과 인물이 계승되어 연속성을 잃지 않도록 전 정권의 성과를 잘 살펴볼 필요도 있다. ‘편 가르기’식의 빨셈정치도 지양되어야 하며 보수와 중도가 통합될 수 있도록 덧셈정치를 지향하도록 한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보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념에 충실한 보수정당을 정립하고 7080정치의식에서 벗어난 참신한 인물들을 찾아야 한다.

### 제247회 정책세미나 질의응답

**질문1** 보수 정권 내에서 정책과 인물 승계가 거부된 예가 있다면?

**답변** 이명박 정부 시절 스마트 교육 정책 시행에 예산 5조 원 투자가 계획되어 있었다. 학생들의 집중력과 장악력 향상에 도움이 됐다. 3년 단위로 총 9년 간 시행되기로 했던 이 정책이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면서 철폐되었다. 국가 발전에 도모할 수 있는 정책과 인물들은 일부 유지가 되어야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질문2** 한국 진보 진영은 대중동원력이 뛰어나다. 보수 진영이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답변** 한국 보수 진영의 대중동원력은 확실히 진보 진영보다 뒤쳐진다. 보수 진영은 친

화력있고 인기 있는 리더십을 선보여야 한다. 유연한 판단력과 설득력을 가진 인물이 보수 진영을 이끌어가야 한다.

**질문3** 오늘날 진보 진영이 주장하는 민주주의 구체적 방안의 한계점은 무엇인가? 보수 진영은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가?

**답변** 진보 진영은 과거 아테네 공론장과 국가를 동일시한다. 하지만 촛불집회와 연대하여 정권을 만들겠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 직접 민주주의는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 제도적·공식적 공론장인 의회에서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국가를 이끌어가야 한다.

※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